

성 명	이영순	소 속	중소벤처기업부
훈 련 국	중국	훈련기간	2018.9.4.~2020.9.3
훈련기관	청도과학기술대학교	보고서매수	100매
훈련과제	중국의 창업생태계 연구를 통한 한국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제시		
보고서제목	중국의 창업생태계 연구를 통한 한국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제시		
내용요약	<p>○ 연구배경</p> <p>중소기업은 혁신과 고용의 원천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세계무역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93-95%, 전체 고용의 약 70%, GDP 기여도의 35-50%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2016년 UN은 매년 6월 27일을 중소기업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p> <p>대기업 수출 중심 국가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은 그 규모는 작지만, 경제의 싹틔줄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p> <p>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창업을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어젠다를 설정하고 차관급에 머물러 있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켜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 전담 부처 신설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경우로, 1950년 상공부 산하에 중소기업과를 신설한 이래 중소기업 정책의 획을 긋는 일이라 할 수 있다</p> <p>최근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개시된 이후,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한창이다. 4차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통한 인류 삶의 질 향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p>		

<p>내용요약</p>	<p>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 각국은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설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학, 생물학 분야의 기술이 상호 교류와 융합하면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는 바,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p> <p>이에 스위스계 UBS 은행은 2016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평가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39개국 중 25위를 차지하여, 우리 정부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 외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나라 5대 경제단체 중에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년 실시한 중소·벤처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실태조사 결과보고(2017.10월)를 보면, 조사 대상 400개 업체 중 323개(80.8%) 업체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준비한 것이 없다고 응답하여, 정부의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p> <p>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을 수립·실시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연구조사 및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p> <p>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업 천국으로 불리우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수립·보완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p> <p>○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p> <p>1. 협소한 내수시장</p> <p>내수 1억론에 따르면 한 나라 경제는 인구 1억명이 되어야 내수만으로도 자립가능한 경제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1억명의 절반도 안되는 인구 5천만명을 보유하고 있고, 그나마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져 생산가능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경제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멈추지 못하면 2030년이면 경제성장율이 0%에 정체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도 무시해서는 안된다.</p> <p>2. 기업가정신 저조 및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 양성 미흡</p> <p>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2019.1월, 중소벤처기업부,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이 저조한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 선호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즉, 그간 우리나라 경제개발 과정 중에서</p>
-------------	---

내용요약	<p>형성된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 따라 청년들의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창업교육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정신 저조는 실제로 청년창업 미흡으로 이어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절실한 작금에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활력 저조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p> <p>3. 자본시장 부진</p> <p>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은 은행대출의 간접시장과 벤처투자, 크라우드펀딩 등의 직접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금조달원으로 자기자금을 이용한다는 92.5%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대출(32%), 개인간 차용(19.7%), 정부 용자 및 보증(4%), 정부출연금, 보조금(2.5%)순으로, 가장 활용이 저조한 부분이 엔젤 및 벤처투자(0.8%)이다.</p> <p>2018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벤처투자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GDP에서 벤처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0.13으로, 미국의 0.37, 중국의 0.24와 비교할 때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p> <p>4. 신산업 규제</p> <p>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차량공유,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기존 기득권과의 갈등, 포지티브 규제 등으로 인해 신기술이 시장에 도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4차 산업혁명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있었다.</p> <p>5. 정부의 4차산업혁명 컨트롤 기능 약화</p> <p>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총괄타워 기능을 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2017.9월 출범시켰다. 출범 직후 2017.11월,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2018.5월 인공지능 R&D 전략, 2019.4월 5G 전략 등을 발표하였다.</p> <p>우리정부의 대응은 중국이 2015년 제조 2025계획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2년 정도 늦은데다가,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양적 질적 수준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양대 계획인 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계획이후 핵심 업종별 발전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맞춰 중국의 3대 대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적극 동참하고 있어 관련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p>
------	--

내용요약	<p>○ 중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분석</p> <p>1. 중국의 중소기업 현황</p> <p>2017년 기준 중국의 전체 기업수는 3,032.7만개로, 농민전문합작사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체 시장주체인 9,814.8만개의 30.9%를 차지한다. 이중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GDP의 60%, 세수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중국의 기업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 중국은 3번의 창업열풍을 겪어왔다. 먼저 1978년 개혁개방이후 시작된 제1차 창업열풍은 1979~1989년까지로, 1982년 통과된 중국 헌법에서 자영업자를 사회주의 공유제의 보완역할로 규정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탄생한 시기를 말한다.</p> <p>이 시기에 약 22.5만개의 자영업자가 360만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89~1991년 3년간의 조정기를 거쳐 1992~1997년 제2차 창업열풍이 불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민의 창업을 고취한 시기로 1996년에 민영기업에서 고용한 인원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하였다.</p> <p>제3차 창업열풍은 1997~2000년으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에서도 취업난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2001년 WTO 가입과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으로 민영기업 증가율은 매년 20%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중소기업촉진법이 처음으로 제정(2002.6)되어 중소기업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이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p> <p>제4차 창업열풍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중국도 중고속의 신창타이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청년실업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중창업 만인혁신 등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매일 신설기업수가 1만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p> <p>2. 중국의 창업시장</p> <p>중국은 인구기준 전세계 1위, 경제규모기준 2위, 토지규모 기준 3위의 경제대국으로, 패권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G2 국가이다. 중국 창업생태계의 빠른 성장에는 중국의 막대한 내수시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중국 소비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교육·문화, 교통·통신, 의료·보건 등 서비스 비중이 2017년 기준 45.5%로 증가하였으며, 둘째 2-4선 도시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1선 도시 이외에서 구매력이 증대되었다. 셋째 밀레니엄 세대인 20대와 40대가 문화, 여행 등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p>
------	--

<p>내용요약</p>	<p>유니콘 기업은 업력 10년 미만 시장가치 10억불(약 1조원)에 달하는 비상장 기업으로, 보통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에 포진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정보통신 시장조사 전문매체 CB Insight가 매년 선정하고 있는 전세계 유니콘 기업 명단을 보면,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6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중국의 유니콘은 82개로, 직전년도 대비 18개가 증가하였으며, 전세계 유니콘 기업 309개 중 26.5%를 차지하고 있다.</p> <p>3. 중국의 창업 문화</p> <p>위에서 보듯이 중국의 창업은 2005년까지 생계형 창업이 주류를 이루다가 2005년 이후로 기회형 창업이 생계형 창업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형 창업의 증가에는 알리바바 마윈 등 성공한 기업인을 롤모델로 삼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중국 대학생의 열망과 정부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이 있다.</p> <p>4. 중국의 창업자금</p> <p>중국의 중소기업 금융은 직접 금융과 간접금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국의 중소기업 금융도 우리나라처럼 간접금융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중소기업 금융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특허담보대출 등 대안적 중소기업금융 상품의 발전도 눈여겨볼만하다.</p> <p>5. 중국의 창업 인재</p> <p>중국정부는 국내외 고급인재 유치를 통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1994년 백인계획을 시작으로, 2008년 천인계획, 2012년 만인계획을 내놓았다. 백인계획은 덩샤오핑이 매년 100명 이상의 유학파를 국내로 귀국시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으로, 동 계획은 2008년 천인계획으로 이어졌다. 천인계획은 후진타오 주석이 향후 10년간 국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 등에게 최대 15억원의 현금지원과 연구 지원 및 자녀 교육 등 다방면의 파격 지원을 한 제도를 일컫는다. 동 계획으로 19년 현재까지 약 8천여명의 고급인재가 중국으로 유입되어 중국의 기술굴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에 발표된 만인계획에는 노벨상 수상이 기대되는 인재 100명을 육성하겠다는 점도 포함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산업분야에서 만인계획을 통해 많은 인재가 유입되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p>
-------------	--

<p>내용요약</p>	<p>6. 중국의 창업 정책과 지원</p> <p>중국 정부는 2017.9.1. 중소기업촉진법을 수정(2002년 6.29일 최초 통과)하였으며, 동법은 2018.1.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총 10장 61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업은 제4장 24조~31조까지에 이르며, 혁신은 제5장 32조~37조에 이른다. 창업과 혁신과 관련된 조항은 절차간소화, 세제, 재정지원에서부터 연구개발, 산학협력, 혁신거점 구축, 인재 육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p> <p>리커창 총리는 2014.9월 다보스포럼 회의에서 “960만 킬로미터의 전국토에서 대중창업, 풀뿌리 창업의 신조류가 일어나고 만중창신과 모든사람이 혁신을 하는 신동향이 형성되었다라고 발언하였다.</p> <p>그후 2015.3월 정부업무보고에서 ” 대중창업 만중혁신 촉진하는 것은 취업을 확대하고 국민소득을 증대하며 사회의 수직적 이동과 공평정의에 유리하다 “고 보고하였다. 바로 이어 2015.6월 국무원에서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대대적 추진을 위한 국무원의 약간의 정책조치 의견을 발표하면서 정식으로 중국 정부의 상창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p> <p>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정부의 상창 정책은 중국이 중고속 성장으로 진입하면서 직면하게 된 취업난의 시대적 상황에서 대중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만인의 창업 촉진과 국부 증진을 도모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p> <p>중국 정부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정부권한 민간 이양을 통한 대민 서비스 개선과 시장 활력 증진을 위해 행정제도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13년 시진핑 신정부 출범이후부터 주로 에너지, 교통, 도시 인프라 등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행정심사허가권을 취소하거나 지방정부로 이관하였다.</p> <p>2017년에는 공상국의 영업허가증, 조직 및 기구 등록증, 세무 등기증 등 3가지 증명을 하나로 통합한 ‘다증합일 제도’ 를 시행하였으며,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증치세율을 제조업 등에서는 기존 16%에서 13%로, 건설업 등에서는 10%에서 9%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엔젤투자자가 하이테크 업종의 시드단계 기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2018년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p> <p>중국에는 중창공간, 과학기술 중소기업 인큐베이터, 대기업이 설립한 인큐베이터, 중소기업 지원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지원기구가 존재한다. 이들 중소기업 지원기구는 혁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자원을 결합하여 전방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의 창업 열풍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p>
-------------	--

<p>내용요약</p>	<p>중국 정부는 창업 분위기 고조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관련 행사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창업관련 행사는 대규모로 다양한 계층별로 개최되고 있으며, 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흐름에 맞는 행사가 국제성과 성과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창업행사는 2015년부터 매년 9월경 개최해오고 있는 전국 대중창업만인혁신활동주간을 들 수 있다. 2017년부터 본 행사는 해외주간으로 확대되어 개최되고 있다.</p> <p>중국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세계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5년 제조2025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 플러스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 제조업과 인터넷을 결합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중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6.5월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3개년 실시방안 수립을 시작으로 2017년 차세대 AI 발전규획(국무원), 차세대 AI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3개년 실행계획(공업정보화부) 발표 등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인재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p> <p>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은 일부 분야의 경우 미국을 능가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논문은 37만여편으로 미국보다 많고, 인공지능 기업수도 중관촌을 중심으로 약 1,040개가 존재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21%를 차지하였다.</p> <p>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인공지능이 이미 실생활에 활용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시안대학교 등 일부 대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이 학생들의 출입 및 수업태도 등을 체크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 발표이후, 2018년부터 중국 교육부에서 학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것을 권장(스마트 캠퍼스 구축 사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p> <p>또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 산하 과학기술 싱크탱크인 중국과학원의 자동화연구소가 2018.7월 유치원단계부터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구글 등 세계적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공동 개발해 이미 교육현장에서 학습하고 있다.</p> <p>중국 창업정책은 큰 성과를 낳았다. 신설기업은 최저납입자본금 폐지 등 상사제도 개혁의 결과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250.27만개, 2014년 365.1만개, 2015년 443.9만개, 2016년 552.8만개, 2017년 607.4만개를 기록하였다. 2017년 신설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1차 산업에서 20.1만개, 제2차산업에서 107.9만개, 제3차산업에서 479.4만개가 새로 증가하였다. 제2차 산업에서 특히 제조업에서 51.8만개가 증가하여, 동기대비 16.3%가 증가하였다. 제3차 산업에서는 교육, 과학기술연구와 기술서비스업, 문화체육 및 오락산업 등 현대서비스업의 신설기업이 빠르게 증가하여 동기대비 각각 33.4%, 24.3%, 17.8%가 증가하였다.</p>
-------------	---

<p>내용요약</p>	<p>기업 퇴출 간소화 개혁의 결과, 기업 퇴출도 용이해졌다. 2017.3월부터 영업 허가후 미개업 기업, 퇴출 신청후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퇴출 간소화를 추진한 결과, 2017년말까지 15.4만개의 기업이 퇴출간소화 절차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하였으며, 이는 전체 퇴출기업의 48%를 차지한다.</p> <p>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이후 신1대 정보기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생물,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재료 및 신에너지 자동차를 대표로 하는 전략 신흥산업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p> <p>중국의 사회과학원 산하 수량경제 및 기술경제연구소는 전략신흥산업에 종사하는 1,320개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2015-2016년간 7대 핵심산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2015년간 163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2016년에는 14.3%가 증가한 187만명의 일자리가 전략 신흥산업에서 창출되었다.</p> <p>○ 한국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p> <p>1.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강화</p> <p>우리나라의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 창업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창업 도전 문호 조성 및 본 글로벌 벤처 육성을 위해 2013년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p> <p>그 일환으로 2013년부터 글로벌 창업기업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글로벌 창업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글로벌 창업기업 지원사업 시행, 글로벌 창업 컨퍼런스 개최 등의 사업을 시행해왔다. 글로벌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2017년 말 기준, 동남아, 유럽 등 11개국에 진출한 총 363개 창업 팀을 지원하여, 1,039.8억원 매출액과 1,181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294.6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p> <p>2. 우수한 외국인재의 기술창업 활성화</p> <p>국내의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고 창업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재 유치를 강화하여 국내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p> <p>정부는 2013년부터 이러한 취지로 외국인 창업비자제도를 신설하고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도 중소기업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외국인 기술창업지원’은 총 108개 기업을 지원하여 94개 국내기업 창업, 62.5억원 투자유치,</p>
-------------	--

<p>내용요약</p>	<p>49.8억원 매출, 100명 신규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동 사업에 참여한 일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창업비자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창업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p> <p>최근에는 외국인 창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 취득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외국인 창업비자 취득을 허용하고, 학사이상의 학력 요건도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우수 인재로 인정하면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출입국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창업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된다.</p> <p>3.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p> <p>정부는 청소년의 혁신적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회과 과목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제라도 기업가정신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잘된 일이지만, 당초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시행하려던 기업가정신 교육이 막판에 빠지게 되어 향후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을 시행하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p> <p>4.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강화</p> <p>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8년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 양성계획(19-23년)을 발표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2019년 인공지능 대학원 3곳(카이스트,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을 선정하여 각 10억원씩을 지원하였다.</p> <p>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것은 잘된 방향이나, 현장에서는 지원금 부족과 인공지능을 가르칠 전문 교수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구글, IBM 등 세계적 기업의 영입 제안으로 기존의 우수한 인재마저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IT 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p> <p>5. 신산업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p> <p>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기술에 대해 일단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하는 방식이나 규제되지 않는 산업모두를 풀어주는 방식 등 전향적인 규제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다. 중국이 그간 제조대국에서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배경에는 신기술에 대해 선허용 후규제로 일관했기 때문인데, 이는 중국인의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된 모바일 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와 차량공유 서비스인 디디추싱에서도 알 수 있다.</p>
-------------	---

내용요약	<p>6. 재도전 문화 조성 및 재창업 지원 강화</p> <p>정부는 그간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중국과 같은 창업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재도전 문화 조성 및 재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p>
------	--